

일반
논문

여성 정치와 페미니즘 정치 사이

촛불혁명 이후 젠더 민주주의의 구축을 위한 모색

이진옥 _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논문요약

이 논문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탄핵 시킨 촛불혁명과 그 이후의 대선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배태한 젠더 동학을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촛불혁명의 여진은 미투운동, 낙태죄 폐지, 불법 촬영 및 편파수사 규탄 시위 등의 페미니스트 운동에 의해 이어지고 있으나, 촛불혁명 과정에서 확인된 남성주의의 재생은 6.13 지방선거에도 이어졌다. 이 현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대의 정치에서 여성의 참여를 강조하는 여성 정치와 페미니즘 의제로 광장 정치의 지속을 주장하는 페미니즘 정치 사이의 이중적 긴장에 대해 분석하며, 이 논문은 '정치적인 것'과 여성 대표성 및 여성 범주의 재구성을 통해 여성 정치와 페미니즘 정치와의 접속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여성 대표성은 대의 민주주의의 치명적 모순과 한계를 집결시키는 양가적이고 모순적 장소이나, 여성 대표성은 페미니즘 정치의 주요한 출발점이자 좌표로서 기능한다. 그런 점에서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및 성평등 개헌은 페미니즘 정치의 핵심적 과제이자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 **주요어:** 촛불혁명, 여성 정치, 페미니즘 정치, 여성 대표성, 젠더 민주주의

DOI: <http://dx.doi.org/10.31008/MV.39.5>

1. 들어가며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이끄는 촛불집회는 서울 광화문을 포함한 전국 각 지역에서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23회에 걸쳐 6개월 이상 지속하며, 약 1,700만 명(연인원, 주최측 추산)의 다양한 일반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고,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의 당선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낸 ‘촛불시민혁명’으로 명명된다(강우진 2017; 권진욱 2017). 촛불시민혁명은 1960년 4·19 혁명과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항쟁, 1987년 6월 항쟁을 잇는 한국의 또 다른 민주화의 변곡점으로서 이미 역사의 궤도에 올랐다. 손호철(2017)은 “짧은 시간에 (단순히 정권교체를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행위”라는 스코치폴(Skocpol 1979)의 혁명 개념에 빗대어 2016년 11월에 시작된 일련의 촛불 집회와 그를 통한 정권 교체를 촛불혁명으로 명명하고, 근본적인 사회 변화의 대한 요구는 정권 교체로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그 혁명은 현재진행형이라고 설명한다(손호철 2017, 92). 이에 이종원(2018)은 혁명에 대한 데이비드 이스턴의 논의를 빌어 ① 정치지도자와 행정조직의 변화, ② 레짐이나 헌정질서의 변화, ③ 정치공동체의 의식과 규범적 수준 변화 등 혁명에 수반되는 변화의 사후적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 여전히 정치구조적 변화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촛불집회를 혁명이라고 지칭하

기에 이르다는 유보적인 해석과 함께 개헌을 통해 촛불혁명은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만권(2017)도 마찬가지로 촛불집회는 비폭력과 평화를 규범으로 장착시킨 정치공간에서 ‘말로 하는 혁명’의 시작이며, 혁명의 수행과 완수는 헌법을 새로 쓰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촛불혁명을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때,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JTBC와의 인터뷰 이후 한국 사회의 자장을 흔드는 미투운동과 2018년 11월 현재까지 다섯 번에 걸쳐 수십 만 명이 결집한 불법촬영 및 편파수사 규탄시위¹⁾는 단적으로 일상 및 정치적 규범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한다. 이렇게 혁명의 여진이 여성에 의해 지속되는 반면, 혁명 발발 이후 정치적 대표자의 자리는 남성이 차지한다. 18대 대선에서 진보정의당 심상정, 통합진보당 이정희, 무소속 김소연, 김순자 등 네 명의 여성 후보들이 박근혜 후보와 경합했던 반면, 19대 대선에서는 15명의 후보 중 여성은 유일하게 심상정 후보뿐이었다. 촛불항쟁 이후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은 제7회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 모두 남성을 공천했고, 미니 총선이라 불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상이 되는 12개 지역구에 공천한 11명의 후보들도 모두 남성이었고, 이들은 모두 당선되었다. 즉, 촛불항쟁 이후

1) 주최 측에 따르면 1차(5월 19일) 1만 2000명, 2차(6월 9일) 4만 5000명, 3차(7월 7일) 6만 명, 4차(8월 4일) 7만 명, 5차(10월 6일) 6만 명 등 시위 참여 연인원이 25만 명으로 추산된다.

국가를 통치하는 제도 정치는 남성에 의해 독점되는 반면, 시민참여의 역동성을 담지한 비제도 정치는 여성에 의해 주도되는 정치영역의 성별화된 이원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촛불혁명의 미완의 과제 달성을 위한 역동성은 제도정치와 유리되며 근본적인 사회변혁과 정치구조의 변화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 논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탄핵이 인용된 최초의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남게 한 촛불항쟁을 여성의 상징적 대표성이 내파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혁명의 과정에서 ‘여성’이 가장 정치적인 장소가 된 젠더 정치의 동학을 간략히 개괄한다. 그를 통해 촛불항쟁 이후 새롭게 구축된 남성주의(masculinism)와 그에 경합하는 여성주의(feminalism)의 성격을 도출하면서,²⁾ 박근혜라는 인물로 표상되어온 여성 정치의 재현의 실패를 복기하며 그 함의를 살펴본다. 둘째, 촛불항쟁의 과정에서 “여성혐오와 민주주의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구호하에 결집한 ‘페미존(Femi Zone)’ 이후 논의된 페미니즘 정치가 주장하는 바를 의의와 한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페미니즘 정치의 실현 및 여성 정치의 재현 실패에 대

2)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따르면 남성주의는 “남성 권리의 옹호; 전형적인 남성이라고 간주되는 의견과 가치 등에 대해 고수와 장려; (좀 더 일반적으로) 반페미니즘, 남자다움(machismo)의 과시”라고 정의된다(Oxford English Dictionary 2000). 그에 반해 여기서 feminalism은 feminism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그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Duerst-Lahti 2008). 특정한 정치 지형에서 젠더 원형이테올로기의 다양한 각본을 소개한 논의는 이진옥(2017a)을 참고하라.

한 극복을 위해서는 여성 정치와 페미니즘 정치 사이의 연결점을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를 위해서 상이한 수준의 ‘정치’ 개념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정치적 대표성의 종합적 접근이 그 연결의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할 것이다. 이러한 여성 정치와 페미니즘 정치의 접속은 흔히 성중립적(gender neutral)으로 논의되는 민주주의에 분배-인정-대표를 축으로 하는 젠더 정의를 핵심적인 가치와 규범으로 포괄하는 젠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이러한 정치적인 것, 여성 대표성과 여성 범주의 재구성에 대한 면밀한 논의를 바탕으로 촛불혁명의 완수인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통한 정치구조적 변화가 동반될 때 젠더 민주주의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2. 여성 정치의 실패한 재현과 촛불혁명의 젠더 정치

100여 년 전 우리 여성들에게는 참정권조차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 현재 세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들이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고 미래에는 더 많은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멍니다. 전 세계 의회에 진출해 있는 여성은 19.3%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여성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 이제 우리 여성은 앞으로 다가올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 저는 이 문제가 단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성을 위한 길이자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박근혜 후보의 2012년 9월 17일 제 33차 세계여성단체협의회 세계총회 축사 중).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존재한 적 없던 ‘여성’으로서 다른 정치인들과 차별화하고 ‘여성성’을 정치 쇄신의 상징으로 내세우며,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자 유신 정권의 계승자라는 역사적 의미를 탈각시키는 데 성공했다. 위의 연설문에서 나타나듯이 박근혜 후보의 적극적인 ‘여성’ 전략은 여성의 저대표성과 일-가정 양립의 여성의 이중부담 등 여성 문제들을 호명함으로써 구체화되었고, 이는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의 사회적 요구를 정치적 수사로 선취한 것이다. 즉, 박근혜 후보의 ‘여성’ 전략은 누적된 젠더 불평등에 대한 정치적 대안이 전무하고 여성 대표성의 공백 상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했으며, 그렇게 박근혜 후보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일시에 독점했다. 그리고 ‘준비된 여성 대통령’은 선망하는 박정희의 딸이자 최초의 여성이라는 기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50-60대 여성 유권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³⁾

3) 2012년 12월 탄생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은 여성 유권자의 선택이었다. 지난 2002년 제16대 대선 이후 모든 선거에서 남성 투표율이 여성 투표율보다 다소 높았으

이진옥(2012)은 이러한 당시 박근혜 후보의 여성/성 전략은 여성정치세력화 운동⁴⁾의 담론을 차용한 것으로서, 박근혜는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수혜자가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까지 한국에서 여성 대표성의 논의는 국회 내 여성의 저대표성의 문제를 세계 여성 권한척도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수치적 증거를 바탕으로 제기하며 한국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서 여성 정치인 참여 확대가 그 조

나, 제18대 대선에서는 여성 투표율이 76.4%로 남성(74.8%)보다 1.6%p 앞서게 나타났다. 동아시아연구원·SBS·KEPS 자료를 통해 투표율의 성차를 분석한 백시내(2013)는 남성유권자의 51.2%, 여성유권자의 55.5%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고 밝힌다. 더 나아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차이에서 보면, 남성은 2.4%에 불과한 반면, 여성은 11%의 차이를 보여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데 여성 유권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이 자명하게 드러난다. 김지윤(2013)은 18대 대선 후보 지지자의 성차 분석을 통해, 박근혜 후보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 유권자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는 가설을 증명한 바 있다.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지지하는 정당과 상관없이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도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남성 지지도가 94.4%, 여성 지지도 95.9%로 소폭의 차이가 있는 반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남성 6.9%, 여성 9.9%로 3% 높게 나타났으며, 무당파의 경우에는 남성 36.8%, 여성 41.4%로 약 5% 높게 나타났다. 더 나아가 이런 경향은 이진옥(2012)과 허성우(2013)의 면접 조사에서도 지지하는 정책과 정당, 정치적 성향과는 별개로 “여성”이라는 점에서 면접참여자들 모두 박근혜 후보에 대한 호감도를 나타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 4)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나아가서는 정치 개혁의 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여성의 참여가 가장 부진한 정치영역에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역량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시도”로 정의되었다 (조현옥 2005, 45).

건이 된다는 규범적 논리가 지배적이었다(손봉숙·박의경 2000; 김형준 2016). 이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도덕적이다, 청렴하다, 성실하다, 세심하다, 관계 지향적이다, 평화적이다 등 여성은 남성 정치인과 다른 구별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듯한 본질주의적 환원의 논리와 동반되었으며, 여성은 자동적으로 여성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하였다. 이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논의는 학문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지체된 채 여성 할당제 도입을 위한 실천적 강령에 의해 주도되면서, 여성 정치는 대의 기구 내 여성 대표의 문제와 동일시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문지영 2012). 그 결과 ‘박근혜’라는 기호에 의해 독점된 여성 정치는 그녀의 실패된 재현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으며, 여성의 과소대표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채 여성 정치세력화 운동은 침몰되고 여성 정치의 담론과 실천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박근혜를 통한 여성 정치의 재현⁵⁾은 역설적으로 그 중요성과 영향력을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생물학적 여성의 남성 지배적 정치 영역에 수장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정치 영역에서 성차의 의미가 재구축되고, 이러한 물리적인 변화는 기존의 심리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들이 교묘하게 얽히며, 심적 과정이 재구성된다. ‘여

5) 미디어에 의한 여성 정치의 재현은 젠더의 상징적 대표성의 사회적 의미들을 생산하는 주요한 과정이 된다(양정혜 2002; 김세은·김수아 2007). ‘최초’ 여성에 대한 끊임없는 언론의 강박적 묘사는 그 여성 기표의 ‘상징적 소멸’을 낳는데 기여한다(Verge and Pasto 2018).

성의 상징적 대표성은 이러한 젠더에 대한 담론적 과정에 의해, “섹스가 오히려 젠더의 효과”가 되는 역설을 반증한다(Scott 2001, 218). 그러나 여성 기표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의미들은 여성이 최초의 국가 상징이 되었다는 선별된 사건으로 흡수되며 뒤틀려졌고,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지니는 젠더의 상징적 대표성은 불평등한 젠더 관계가 여성 우위로 역전되는 듯 보이게 만드는 젠더 미끼(gender decoy)로 작용하였다(Eisenstein 2007). 즉,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여성/성의 전략은 그를 뒷받침할 정책과 실행 체계가 전무했던 만큼, 그녀의 상징적 여성 대표성은 태생적으로 내적 균열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는 그녀의 권력을 지탱하는 군사정권의 남성 지배 카르텔로 구성된 극대화된 남성주의를 감추는 외피가 되었다. 젠더 불평등의 지표들과 불일치하는 박근혜 정부의 여성 정책과 내각 내 여성 관료의 부재⁶⁾는 여성 대표성의 주장을 공허하게 하며, 여성 정치의 존재 근거를 부식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그 결과 정치와 역사를 탈각시키는 전략으로 징발된 ‘여성’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에 입건되고, 탄핵되어 파면된 최초의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정치적

6)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 여성 지위를 나타내는 고위 공직자 여성 비율 및 여성 내각 비율은 전 정권보다도 낮거나 정체되었고, 그 결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를 보면 2012년 108위보다 더 떨어진 145개국 중 115위를 기록했다(경향신문 2016/03/07).

인 장소'로 치환되었다(허윤 2016).

여성 대표성의 공백에서 등장한 박근혜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으로서 일반 유권자의 인식에 '여성'이라는 기호를 성공적으로 침윤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여성'으로 잠식되었다. 더불어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점 특혜 논란은 삼성을 위시한 대기업들과 전방위적 관료 집단이 연루된 초유의 국정농단과 조직적 부정부패를 '여성'의 문제로 전소시키는 효과를 발휘하며, '여성'이 혁명 발단의 원인으로 지목된 또 다른 사건이 되었다.⁷⁾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면 위로 올리고 촛불혁명의 신호탄은 이화여대 학생들의 끈질긴 투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하는 여성혐오의 정동 위에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공론장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시험대가 되었다. 반대로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이후 거대한 물결로 성장한 페미니스트 운동이 정치적으로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탄핵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의 선거 정치는 한편으로는 남

7) 1960년 4월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은 3·15부정선거가 결정적이었지만, 윤정란(2010)은 이를 초래한 중대한 원인 중 하나를 여성들에서 찾는 당시의 분위기를 상기시킨다. 박마리아와 프란체스카를 비롯한 '사모님족'을 이승만 정권 부패의 원인으로 보며, 여성의 사치와 허영이 정치 사회적인 부패를 가져왔다는 주장이 확산되었으며 이는 여성 정치참여 망국론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7·29총선에서 박순천이 유일하게 여성으로 당선된 결과에 대해 여성계는 여성 정치참여를 불신하는 사회 분위기를 그 원인으로 짚었다(윤정란 2010, 256-260).

성에 의해 독점된 남성주의의 복원과 다른 한편 페미니스트 정치의 제화 사이에서 진동하는 이중적 긴장 위에서 출발했다(이진옥 2017a, 118). 선거 정치에서 벌어진 일련의 성별화된 사건들은 강고한 남성 유대에 기초한 정치 세력의 남성주의와 그에 맞서는 페미니스트 정치로서 여성주의의 대결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선거 정치 지형에서 젠더 정치의 역동성을 보다 가시화하였으며 페미니스트 정치의 좌표를 보다 중심에 위치시켰다. 일례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스트롱맨”의 슬로건이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선언, 그리고 TV 대선 토론회의 동성애 찬반 논란은 젠더 정치가 기존의 이념 갈등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치적 균열로 전면적으로 등장했음을 예고하는 서막이었다(이진옥 2017a, 119~126).

19대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룬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 성평등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은 18대 대선과 달리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인 태도로 전환한 시점부터 뼈격거리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기표를 “공중 납치”했다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선언은 동성애 반대 이후 성소수자 여성의 인권을 분할하며 여성을 “인수 분해”하였다(이진옥 2017b, 49~50). 비록 문재인 정부는 내각에 장관급 여성 비율 30%로 출발하고 꾸준히 여성 고위직 관료의 비율을 높이는 등 다양한 성평등 정책 구현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재생되는 남성주의의 제약된 조건에서 작동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임면권 행사의 문제이다. 다수의 여성 비

하 저서를 쓴 탁현민에 등용에 대해 여러 여성단체와 정현백 여가부장관 여야를 막론한 여성 의원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경질요구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강력한 남성 동성 집단에 의한 비호라고 볼 수 있다.⁸⁾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성평등 개헌이 곧 동성애 개헌”이며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라는 보수기독교 세력의 공세에 굴복하여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조항으로 포함하고 개인 단위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성평등’의 문구가 삭제된 것뿐만 아니라, 양성 간의 동등한 참정권을 보장하는 ‘양성평등’ 개헌안도 배제되며, 여성은 “공중 분해”되었다(이진옥 2018, 173).⁹⁾ 이 과정에서 국민 주도형 개헌을 위해 마련한 플랫폼은 국민개헌대토론회와 국민개헌넷에 보수 기독교 세력이 가짜뉴스(한겨레 2018/09/27)를 기반으로 조직적으로 동원한 동성애 반대 세력이 개헌의 내용을 무참히 왜곡하고, 성소수자, 외국인, 난민, 무슬림 혐오를 조장함으로써 성평등 개헌의 취지는 사장되고 개헌 과정의 정당성은 크게 훼손되

8) 2018년 6월 말 탁현민 행정관은 사의를 표명하였으나,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첫 눈이 오면 놔주겠다”는 말로 만류했고, 다시 이 말은 반복되었다(노컷뉴스 2018/11/16).

9) “국가는 선출직 임명직의 공직 진출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는 조항은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세력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도 주장했던 개헌안이었으나,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위원에 따르면, 이 조항으로 인해 “소수 여성 엘리트만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대통령 개헌안에서 삭제되었다고 한다.

었으나, 촛불항쟁 이후의 새로운 사회 계약을 쓰는 과정에서 보수기독교 세력의 위협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고, 이들의 조작과 선동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여성운동과 성소수자 운동의 목소리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지 않는다.¹⁰⁾ 다시 말해, 여성과 성소수자의 당면한 문제는 ‘정치적인 것’의 의미화와 위상을 획득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3. 광장과 ‘페미니즘 정치’

손희정(2015)은 #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 해쉬태그 운동과 메갈리아의 등장을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명명한 바 있다. 페미니스트 물결의 징후들을 단순히 찬양하고 미화하기보다, 그녀는 페미니즘 리부트가 발생한 정치경제적 조건들과 젠더화된 모순을 분석하며, 소비

10) 2018년 9월 최초로 열린 인천퀴어축제는 보수기독교 세력에 의해 저지당했고, 정부는 이들의 폭력 행위를 방조했다(한겨레 2018/09/11). 여성운동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대선 공약으로 문재인 후보는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약속했으나, 여전히 양성평등위원회로 남아 있으며 이 위원회의 권한과 활동은 미약하다. 더 나아가 젠더 이분법을 넘어서는 성평등의 방향으로 전환하려 했던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기본 계획은 이들의 훼방으로 양성평등 정책으로 회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정책에 성소수자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공개적 차별을 선언했다. 그 결과 여성정책 거버넌스의 주체들, 여성운동과 정부, 여성정책 전문가들은 정치적인 정당성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즉 입지가 약화되었다(이진옥 2018).

사회의 대중문화와 대중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포스트-페미니즘’의 자장 안에서 등장했다고 진단한다(손희정 2015, 15). 그리고 페미니즘 리부트가 발생한 혐오 정동에서 대중문화의 여성 실종 현상은 여성혐오의 이면이며, 이 현상의 탈출구로 여성 재현의 필요성을 역설한다(손희정 2017). 자기계발과 개인주의라는 신자유주의의 아비투스(아비투스)를 체현한 소비 주체들의 익숙한 방식으로 접속한 페미니즘은 비록 한계가 분명하게 내재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페미니즘’은 그 아비투스의 규칙을 파열시킬 가능성 또한 담지하고 있다. 2016년 5월 17일 발생한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은 페미니즘 리부팅 과정에서 한국 페미니스트 운동이 확장하고 대중화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중차대한 성별화된 사건(significant gendered event)로 기록될 수 있다. 이 사건 이후 메갈리아와 워마드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페미니즘은 오프라인 세계로 나왔으며, 여성혐오 범죄, 성폭력, 낙태죄, 불법촬영 등의 일상의 삶의 공간에서 제기되는 페미니스트 의제들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정치화하는 촉발점이 되었다(김리나 2017). 이러한 힘들은 페미니즘이 발생한 그 조건에서 충돌하고 갈등하고 연대하며 축적되어 갔고, 낙태죄 폐지 운동, #OO계_성폭력을 거쳐 미투운동의 진양지가 되었으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의 토대가 되었다.

여성혐오에 대항하는 페미니스트 세력이 마주한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핵을 위한 광장은 광장 밖과 다르지 않은 여성혐오가 박근혜 대통령 비판으로 둔갑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이에 맞서 페미니스트들은 ‘페미존(Femi Zone)’을 만들어 독자

적인 집회를 조직하고, 정치세력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김홍미리 2017). 페미존은 혐오 발언과 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평등한 집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고, 이 페미존에 참가한 단체들과 개인들은 이를 새로운 페미니스트 네트워킹의 계기이자 공론장으로 확대 발전시켰다. 11월 26일 3차 페미존의 사전 행사로 ‘박근혜 퇴진을 넘어, 다른 세상을 향한 페미니스트 시국선언’을 열었고, 12월 23일에는 ‘강남역10번출구’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의 주관으로 ‘페미니즘, 새로운 민주주의를 상상하라: 박근혜 퇴진정국과 그 이후’ 시국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더 나아가 페미존의 실험과 연대는 ‘페미광장’으로 이어졌으며, 페미존을 페미니즘 정치 공간으로서 의미화하고 ‘페미니즘 정치’의 구체적인 상을 함께 그렸다(이지원 2017, 157). 페미니즘 정치의 장이자 페미니스트 네트워킹 허브로서 페미광장은 페미니스트 정치의 중요한 축이자 촛불항쟁에서 페미니즘이 정치와 맺는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제1차 페미광장에서 발표된 이현재의 글은 ‘페미니즘 정치’의 방향과 개념을 개괄한다.

이제 우리는 박근혜 퇴진 정국을 맞이하여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 ‘페미니즘 정치’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권의 교체가 아니라 정치의 전환입니다. 정치의 전환이란 단순히 대통령이 바뀌거나 우파에서 좌파로 정권이 교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성차별을 가져온 우리 사회의 권력, 제도, 정책 전반을 비판하고 나아가 이에 균열을 내

고자 합니다. 우리는 젠더 트러블을 일으키려 합니다. 우리는 기존의 권력을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비판함으로써 그로인해 억압되었던 모든 성적 정체성을 그 오랜 시슬에서 풀어버리고자 합니다. 페미니즘 정치는 부차적이거나 부분적이거나 나중에 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차별은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만큼이나 근본적이며 우리의 일상 곳곳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페미니즘 정치는 지금 여기 권력이 소용돌이 칠 때 함께 시작되어야 합니다(이현재 2017, 3).

페미니즘 정치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의 패러다임의 변화이며, '일상 곳곳에 존재'하는 성차별은 정치의 문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한 주장은 더 나아가 '여성 정치에서 페미니즘 정치로' 그리고 '대의 정치에서 광장 정치'로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이어진다. 페미광장이 주장하는 페미니즘 정치는 젠더 이분법을 수행하고 페미니스트 대의에 실패하는 여성 정치와 구별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획득한다. 페미니즘 정치는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투쟁'을 통해 "성적 차별을 가져오는 젠더 체계를 반복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해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치"이자 성적 차별뿐만 아니라 "모든 차별을 고려하는 정치"로 "낮선 자들과의 연대"를 위한 포괄적인 정치라고 정의될 수 있다(이현재 2017, 4-6). 그리고 그 정치의 공간은 바로 '광장'이며 페미니즘 정치는 광장의 공론장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이러한 페미니즘 정치의 직접 민주주의를 향한 충동은 여성학과 여성운동 등 페미니스트 진영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지점이다. 이들은 선거에 의해 새롭게 조형되고 재편될 남성 권력에 의지하기 보다는 여성 시민이 수평적 관계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광장 정치의 지속을 기대한다.

선거관에 너무 큰 기대를 걸면 안 된다.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진 콜드플레이의 ‘비바 라 비다’ 노래는 쫓겨난 왕의 독백이지만 실은 국민주권이 사라진 대의제의 붕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민이 깊었던 랑시에르는 ‘위임’과 ‘대표’를 구분해야 한다면서 추천제를 제안하였고 동시에 광범위한 광장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평소에 ‘시민’으로 불리지 못했던 이들이 스스로 시민권을 획득한 영토가 바로 광화문이었다는 이택광의 말처럼 광장의 영토는 새로운 국민들을 탄생시킨다. …… 수평적 글로벌 연결망으로 이어진 지방분권의 역사를 써가야 할 때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광장에 모여 시민의 힘으로 중앙집권 권력의 아우라를 벗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조한혜정 2017/04/11).

직접 민주주의의 장으로서의 정치적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법의 규범성과 법의 수행성 사이에서 정치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입장은 더 문제적이다. 여성은 적극적인 저항의 주체이고, 또 새로운 정치의 참여자이 새로운 정치의 장을 만들어가는 주체이다. 그러나 남성중심의 공적 영역 중심이 되는 현실 정치의 장에서 다분 사회적 소수자들과 함께 배제된다. 그리고 통치 내부의 복지 수혜자 그리고 통치의 대상으로 배치된다. …… 광장의 정치는 규범적 법의 활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가능성을 열기 위한 정치이고, 법이 정치의 영역임을 제안하는 공론장이다. 새로운 정치의 장, 공론장은 새로운 젠더 정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제 탄핵 비상정국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광장이 만들어내는 소통과 참여의 직접 민주주의 혹은 정치적 자유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김은실 2017, 46).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의 충동은 촛불항쟁의 젠더 정치가 어떻게 여성을 그리고 페미니즘을 결합했는지, 촛불항쟁 이후 남성주의가 복원되는 과정을 목격할 때 더욱 이해 가능하다. 일례로 표창원 의원이 주관하여 국회의원 회관에서 2017년 1월 20일부터 진행된 시국 비판 풍자 그림 전시회 ‘곧, Bye!! 展’에 포함된 〈더러운 잠〉을 페미니스트들은 여성혐오라고 비판했으나, 페미니스트 비판의 목소리에 편승하여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수구 세력은 여성혐오를 둘러싼 논쟁의 장에서 우위를 점했던 반면, 소위 진보진영의 온라인 및 다양한 방송 매체들은 이것을 여성혐오라고 보는 페미니스트의 시각이 편협하고 보수 정당에 의해 이용당하는 것뿐이라고 공격했다. 페미니스트의 목소리는 수구 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강탈당했고, 소위 진보 세력에 의해 침묵당했다(이진옥 2017a, 62-63). 즉, 여성을 넘어 여성혐오, 그리고 페미니즘마저 정치 세력 간의 권력 (재)창출을 위한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 박근혜를 통한 여성 정치의 재현 실패와 남성 중심의 정치질서에서 여성은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구조되고 페

미니즘은 각색되는 현실에서, 페미니즘 정치가 여성 정치와의 결별을 통해 정립하고 대의정치와 유리된 광장의 정치를 지향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광장의 정치가 여성의 정치 참여와 대표에 대한 전략과 모색을 동반하지 않을 때, 정치권력은 남성에 의해 독점된 상징적 젠더 질서를 반복하고 재강화하며 페미니즘 정치의 퇴로를 상시적으로 열어두는 역설을 낳는다.

그 결과 남성 지배의 영역에서 타자로서의 여성에 의해 체현된(embodied) 대표성은 여전히 소수 집단에 불과한 여성들을 특수하고도 예외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징표화 문제에 직면한다. 이는 다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과장되거나 폄하되며 여성 정치 재현의 실패, 즉 상징적 소멸(symbolic annihilation)로 귀결되어, 성적 타자의 대표 불가능성을 질문하게 한다(권김현영 2012). 즉, 최초의 여성 대통령의 탄생과 몰락은 대표성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결핍이 어떻게 여성의 육화된 재현에 응집되어 있는가의 현상의 문제임에도, 페미니즘 정치 담론의 직접 민주주의로의 강조는 여성 대표성의 문제를 삭제시킴으로서 다시 대의 민주주의가 남성화된 정치의 과정으로 남겨두는 데 기여하는 담론적 효과를 낳는다.

4. 여성 정치와 페미니즘 정치의 접속을 통한 젠더 민주주의의 구축을 위한 제언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에서 목도한 오래된 상징적 젠더 질서의 복원은 페미니스트에게 당혹스러운 사건이었다. 여성 대표성이 광장에서 부정될 때 일부의 페미니스트들은 대안적 여성 대표성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페미니즘 정치는 우회로를 택하였다. 아래로부터의 페미니즘 정치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어떤 여성 재현도 쉽게 뒤틀릴 수밖에 없으며, 여성 대표성은 페미니즘의 안전한 통로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페미니즘 정치의 문제는 광장의 참여와 일상의 정치 활동 및 주장들(claims)이 자동적으로 제도 정치와 공식적인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점에서 이 절에서는 ‘정치’의 복합적이고 모순적 개념이 여성 정치와 페미니즘 정치의 실천적인 과제를 분리하고 그 둘의 관계를 요원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진단을 바탕으로, 페미니즘에서 정의하는 모호한 정치의 개념을 정리하고, 정치적인 것과 여성 범주 및 여성 대표성의 재구성을 통해 페미니즘과 정치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정치 개념의 정리는 상이한 수준의 대표성이 여성 정치에 함의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이해하도록 도우며, 이러한 개념적 정리를 바탕으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 위에 구축되는 젠더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촛불혁명의 완성 과정임을 개괄적으로 논증할 것이다.

1) 정치적인 것의 재구성

페미니즘이 제도 정치 또는 대의 민주주의와 결별하려는 노력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해온 자유주의 또는 평등 페미니즘에 대한 급진 또는 차이 페미니즘의 강력한 사상적 토대에서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1960~1970년대 미국에서 풍미한 급진 페미니즘은 타자로서의 ‘여성’ 문제에 대해 천착하며, 젠더 위계질서에서 폄하되고 주변화되어왔던 여성의 의제들을 새롭게 가치 정립하고, 동시에 기존의 만들어진 여성의 상을 해체하는 이중적 충동을 지니고 있다. 특히,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선언적 명제는 당시 미국 전역에 촉발되었던 반전, 평화, 흑인민권 운동 등의 신사회운동 또는 정체성의 정치 조류에서 유래하였고 페미니스트 운동이 ‘정치적인 것’에 대한 급진적인 재전유를 통해 이를 중요한 이론적, 실천적 강령으로 정립하는 데 성공한다(Heberle 2016). 『성의 정치학(Sexual Politics)』의 저자 밀렛(Millet 1990, 50)은 정치를 “한 무리의 인간이 다른 무리의 인간에게 지배되는 구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재정의 한다. 즉, 광의의 권력 개념을 정치의 핵심에 위치시키면서 남성 우위의 가부장체제의 이데올로기적 조건이 ‘여성다움’을 여성의 ‘본성’으로 생각하게 하고, 이런 여성과 남성의 피지배 관계가 ‘합의’라는 사회화 과정을 거쳐 정당화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밀렛의 주장은 이제 정치적인 것의 핵심은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에 천착되고 그 정치가 발생하는 공간은 의회와 거리,

집, 침실, 여성의 몸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의 진복적 재 개념화는 당시 급진주의 그리고 문화주의 페미니즘과 급속하게 친화력을 맺으며 페미니즘 운동의 토대가 되었으며, 그 위상은 여전히 페미니스트 정치의 강고하게 남아 있다.

우리가 모임에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개인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이었다. 개인적인 해결책이란 없었다. 집단적 해결을 위한 집단행동만이 있었다. 나는 이런 모임들에 계속 참여했다. 내가 읽은 모든 글, 내가 참여했던 모든 '정치적 토론', 내가 했던 모든 '정치적 행동', 말하자면 지난 4년간 내가 해왔던 모든 활동이 주지 못했던 정치적 경험을 그 곳에서 얻었기 때문이다. 나는 장밋빛 안경을 벗어버리는 대신 끔찍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여성으로서 내 삶이 얼마나 암담했던가를. 그렇게 나는 '타인'의 투쟁에서 느꼈던 노블레스 오블리주식 감정이나 지적이고 난해한 이해와는 다른 것 '모든 것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얻었다(해니시 2016[1969], 101).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다수의 신사회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획득하면서, 기존의 남성 중심의 사회운동과 결별하고, 분리주의적 전략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개인적인 수준의 의식고양과 문화적인 가치 창출과 여성성의 재구축을 통해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의 명제는 급진적 정치성을 선회하면서 페미니스트 운동의 강력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금기시되

거나 폄하된, 혹은 ‘자연적’인 것으로 당연하게 치부되어 왔던 여성의 경험들이 말의 권위를 획득하고, 여성은 페미니즘을 통해 자기 존중감을 높이고 내적 변혁의 시간을 겪으며 다양한 삶의 수준에서 기존의 젠더 관계를 전치시킬 힘을 기르게 되었다. 즉, 정치적인 것에 대한 급진적인 재개념화가 낳은 페미니스트 정치는 더욱 강렬하고 폭넓은 효과를 불러일으켰지만, 급진 페미니즘의 한 그룹에 대한 평가에서 “정치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을 융합함으로써 생활 방식과 정치 투쟁을 동의어로 만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실제로 개인의 변화가 정치 행동의 대체물이 됐다”는 에콜스(2017)의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에콜스 2017, 277).

페이트만(2018)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개인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의 상호관계는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시민으로서 상호작용과 결정을 내리기 위한 질서 짓는 기준과 원리가 친구나 연인과의 관계 기저에 놓여 있어야 하는 기준과 원리와 정확히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페이트만 2018, 186). 사적인 삶과 정치적 삶의 이분법적 구분에 기초한 ‘개인적인 것’은 시민권의 허구나 정치적인 것의 물화와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페이트만은 주장한다. 변증법적 상호관계 속에서 이 두 영역의 구별됨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 자유민주주의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삶의 두 영역 모두의 변화와 변형이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주장이 슬로건 이상으로 간주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한다(페이트만 2018, 187). 즉, 자유민주주의가 근간하고 있는 공사 분리는 여성 억압과 배제의 근거가 되었다는 페미니스트 비판은 공사 구분의 전적인 해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영역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인정과 성별로 분리된 공사 영역의 경계의 재편을 요청하는 것이다(문지영 2013, 77). 따라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의 구호를 슬로건 이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페이트만의 경고는 공사의 구분을 재편하는 데 핵심적인 ‘정치적인 것’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스콰이어즈(Squires 1999)는 이러한 ‘정치적인 것’의 재구성이 바로 마치 대립하고 있는 듯한 여성 정치와 페미니즘 정치의 관계와 두 주장 사이의 긴장과 역설을 해소하는 전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페미니즘이 정치’라는 주장과 정치가 배타적으로 남성에게 제한되어 있는 사실 사이의 명백한 긴장은 여기에 적용된 정치의 다른 개념에 놓여 있다. 여성은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대체로 배제되어 있다. 여기서 정치는 정부의 제도적 장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정치가 권력 분배에 대한 협상과 투쟁의 과정으로서 정의된다면, 여성은 정치에서 전혀 배제되지 않았다. 오히려 여성이 정치를 작동시키고, 여성은 정치의 작동에 의해 구성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두 개의 주장이 지니는 명백하게 역설적인 본질은 정치적인 것 자체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Squires 1999, 2).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 정치’에서 정치는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대의 기구에서 발생하고, 이러한 제도 정치 내의 여성 배제를 문제 삼고 참여를 주장하는 의미하는 반면, ‘페미니즘 정치’가 추구하는 정치는 성차별이 발생하는, 다시 말해 성별 권력이 비대칭적인 모든 일상의 장소가 되며 그 정치 주체는 여성뿐만 아니라 젠더 이분법적 질서에 억압 받는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가진 모두가 된다. 스콰이어즈는 전자를 평등의 정치를 지향하는 ‘포섭(inclusion)’ 전략으로, 후자를 차이의 정치를 추구하는 ‘역전(reversal)’ 전략으로 분류하고, 이 두 전략 간의 대립항을 불안정하게 하는 ‘전치(displacement)’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를 다양성의 정치로 분류한다(Squires 1999). 스콰이어즈의 이런 주장은 정치의 수행적 본질과 대표성의 구성적 특질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성의 이해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정체성과 이익이 새롭게 구성된다. 물론 이것이 존재하는 여성과 여성의 이해를 더욱 강화하는 측면 또한 부정할 수 없지만, 정치는 항상 새로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익(interests)/욕구(needs)를 개념화할 수 있는 과정을 창조한다(Squires 1999, 215-216). 그런 의미에서 여성 정치와 페미니즘 정치는 대립항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구성적이며,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치적인 것’의 의미와 위상이 획득되고 공사 구분의 재배치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2) 여성 대표성과 '여성 범주의 재고찰: 여성 정치와 페미니즘 정치의 접속

스콰이어즈(1999)의 전치 전략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통해 페미니즘 정치가 주장하는 여성의 이해를 정치적인 것으로서 담론적·실천적으로 구성해내는 포괄적인 과정으로서 여성의 대표성을 개념화하는 구성적 대표성 개념과 상통한다. 이 구성적 대표성의 개념을 여성 정치와 페미니즘 정치의 논쟁적 분류에 위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표성에 대한 지난 논의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나 핏킨의 고전적 대표성 개념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다른 이가 대표할 수 있도록 법적인 권한을 제공하는 형식적(formalistic) 대표성, 인종·성·종족 또는 주거지와 같은 유사한 특질을 공유하고 있다고 가정되는 집단을 대표한다는 기술적(descriptive) 대표성, 국민의 열망 또는 관념을 대표하는 상징적(symbolic) 대표성, 대표자가 한 집단의 정책 선호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질적(substantive) 대표성으로 구성되며, 핏킨은 이 중 대표성의 궁극적인 핵심은 실질적 대표성의 추구에 있다고 주장한다(Pitkin 1967). 여성 정치가 여성의 수적 대표성, 즉 기술적 대표성에 방점을 찍는 반면, 페미니즘 정치를 추구하는 세력은 '페미니즘'을 통해 실질적 대표성을 정치의 핵심으로 위치시킨다는 점은 충분히 유추 가능하며, 이러한 페미니즘 정치 주창자들은 기술적 대표성보다 실질적 대표성을 본질적으로 우위에 놓는 핏킨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필립스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좀더 공정한 대의 체계는 하나와 다른 하나 사이의 허위적 대립 사이

가 아니라, 바로 관념(ideas)과 존재(presence) 사이의 관계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핏킨의 대표성 개념을 반박한 바 있다(Phillips 1995, 25). 더 나아가 필립스는 만약 여성의 이익이 분명한 것이라면 남성에게 의해 대의되어도 상관없을 테지만, 오히려 여성 고유의 이익이 “미리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흔히 대표들이 상당한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의 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다(Phillips 1998, 234-235; 문지영 2012, 171에서 재인용).

더 나아가 최근의 페미니스트 대표성 논의는 이러한 핏킨의 대표성에 대한 분리적 접근을 지양하고 보다 정치가 비/공식제도 등의 다층적인 수준에서 대의와 숙의, 참여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만큼, 통합적으로 대표성에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선거 주기 사이와 밖에서 요구(claims)를 만들고 듣고, 수용하고 거절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재개념화할 것을 제안하는 사워드(Saward 2010, 49)의 주장을 바탕으로, 여성의 실질적 대표성은 더 이상 여성 전체를 대변해서 요구를 만드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제도 안팎에서 벌어지는 집단의 이해를 둘러싼 논쟁, 숙의(deliberation), 경쟁을 포함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것이 주문된다(Celis et al. 2014, 151). 이러한 대표성의 재개념화가 그렇다고 다양한 이익을 요구(claim-making)하는 실질적 대표성은 다양한 인구경제적인 특징을 체현하는 대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Celis 2008)는 주장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과소 대표와 남성의 과잉 대표는 제도 안팎에서 요구를 만들고 논쟁

과 숙의, 경쟁의 통합적 과정으로서의 대표성을 매개하는 주체의 비대칭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페미니스트들은 논쟁 속에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다.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현장 곳곳의 광장에서, 난무하던 혐오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고 '페미니스트 시국선언'을 했던 우리의 선언들처럼. 정상성과 효율성의 위계를 넘어, 해일이 밀려올 때 그 누구도 차별받아 남겨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구조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정치를 페미니즘 정치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확인하면서, '진짜 여성이 누구인지'를 대신 하여 '지금 누가 여성의 위치에 놓여있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말이다(나영 2017, 116).

여성 정치는 여성 주체에 대한 별다른 질문과 사유없이 '여성성'을 강조하여 생물학적 본질주의의 오류를 재생산하거나 혹은 '여성'의 범주를 텅 빈 기표로서 그대로 차용하여 논쟁과 숙의, 경쟁의 과정을 삭제시키는 반면, 앞의 페미론과 페미광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나영(2017)은 그 '여성'을 질문하면서 '페미니즘 정치'의 지향을 밝힌다. 페미니스트 정치가 아닌 페미니즘 정치라고 명명된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으나, 페미니즘 정치는 '페미니스트 주체'가 아닌 페미니즘을 개념화하고 정의하며 의제 설정과 주장의 과정에 집중하는 관념(idea)이자 '그 누구도 차별받아 남겨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치적 목표로서 페미니즘이 대표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페미니즘 정치를 추구하는 이들이 지닌 공공성에 대한 헌신은 페미니즘 실천과 담론의 사회적 확산과 낙태죄 폐지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에서 두드러지게 기여하며 페미니스트 의제를 정치적인 것으로 세우는 데 혁혁한 공로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 참여의 과정을 통해 페미니즘 대표성의 주장(claims)은 구체적인 내용을 갖치게 된다. 비록 페미니즘이 단 한 번도 반대 없는 단일한 목표를 추구한 적 없는 경합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에 다른 페미니즘의 진영이 동의할 것인가의 문제는 차지한다 할지라도 말이다.¹¹⁾

11) 대표적으로 불법촬영 및 편파수사 규탄 시위를 이끌었던 ‘불편한 용기’는 시위 현장에 생물학적 여성만 입장을 허용하는 정책을 취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여성’에 대한 질문은 봉쇄되었고, 일부는 대신 트랜스 여성을 배제하는 ‘위마드’의 주장을 답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보명(2018)은 이러한 위마드의 입장이 ‘일베’의 혐오의 문법을 해체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전유하여 여성우월주의와 본질주의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게이 남성 및 트랜스 여성, 그리고 퀴어 정치화 전반에 대한 혐오와 적대의 조직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손희정(2018)은 “대중운동으로서의 페미니즘은 피해와 고통을 거점으로 한 강력한 정체성의 정치에 기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페미니즘 리부트를 불러온 대중성의 핵심”이었다고 보며, 여전히 이 한계를 극복할 방법은 찾기 어렵다고 토로한다(손희정 2018; 천정환 2018, 25에서 재인용). 자칭 래디컬 페미니즘이 여성혐오에 맞서지만, 혐오로부터 페미니즘을 분리하겠다는 적극적인 사유와 실천의 노력 대신 미러링의 기법이 고수되었고 동시에 혐오의 언어를 생물학적 남성이라는 이유로 성소수자와 난민 등의 사회적 소수자들에게도 반복 재생하였고, 이를 통해 이 그룹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혐오 집단과 혐오의 정동경제를 공유한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본 논문이 주장하는 ‘보편적’ 여성의 정치적 소환과 호명은 “정치의 단정적 순간”에 기초하며 이는 판단의 윤리적 기준 및 포용적 인식론 없이 이루어질 수

그러나 이러한 페미니즘 정치가 페미니스트 운동의 자장에 지배적인 담론이 되는 경향성은 여러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으며, 이 문제들은 주의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페미니즘 정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장은 있으나 그 주장은 누군가에게 위임되고 대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여성 정치와의 결별 선언 이후 대표자의 성은 질문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주체의 문제는 논의 범주 밖에 위치한다. 일례로 한국의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 심리 중인데,¹²⁾ 이 과정에서 대의기구인 국회는 철저히 부재하며, 페미니즘 정치의 주창자들에게 국회는 관심 밖의 범주이다. 마찬가지로 간통죄 폐지 또한 국회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페미니스트 ‘정치의 사법화’ 경향은 역설적으로 페미니즘 정치가 추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그와 대척점에 있는 엘리트 민주주의와 친화력을 보인다는 점은 많은 논쟁점을 시사한다. 제도 밖의 정치가 제도 안으로 침투할 때 굴절되는 대표성의 문제는 불가피한 제도 정치의 작동 오류로 간주되고, 그 결과 주장(claims)은 있으나 책무성(accountability)은 페미니즘 정치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헌신과 자발성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는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이들이 범하는 오류와 한 궤를 같이 한다. 그 오류는 공론장과 참여의 광장

없다. ‘여성’ 범주에 대한 이와 같은 논쟁은 페미니스트 정치에 항상적으로 내재한 특질의 현재적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형상은 항구적이지 않으며, 변화될 수 있다.

12) 한국의 이런 상황은 최근 국민투표에서 낙태 합법화를 이룬 아일랜드와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된 아르헨티나와 매우 대조적인 풍경을 이룬다.

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수많은 노동과 시간이 제약하는 정치 수행의 현실적 조건을 간과하고, 그로 인해 지속 불가능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직접 민주주의 그 자체를 이상화하는 데 있다. 더불어 광장 정치의 참여 시간과 비용이 ‘참여’ 그 자체를 통해 보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낭만적 기대와 정치적 순수성을 이유로 대의 정치와 거리두기는 정당화되고, ‘참여’가 ‘대표’의 문제와 유리된 채 그 자체로서 정치적 대표성의 문제가 정리된다면, 남성 지배적 정치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별 탈 없이 지속될 것이며 그 남성의 폐쇄적 세계는 ‘도망치는 민주주의(fugitive democracy)’의 쉼터가 될 것이다(이진욱 출간예정).

남성 지배적인 정치에 대한 대항적 주체로서 ‘여성’의 범주는 포기될 수 있는가? 조한혜정은 아래 사설에서 ‘수컷들의 정치’와 대비되는 시민의 공론장의 원탁회의에서 여성의 참석을 기대하는 메시지를 남긴다.

가능한 한 남녀를 갈라서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 중이건만 5월 25일 나토 정상회의 때 트럼프와 마크롱의 악수 장면에서 ‘수컷들의 정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참고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일본 아베 총리와 19초간 힘찬 악수를 했고 메르켈 독일 총리의 악수는 거절했다. 사전에 트럼프의 악수 방식을 ‘연구’했다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자기 쪽으로 당겨 유리한 자리를 만들고 손이 하얘지도록 힘을 주었다. 트럼프는 손을 풀려고 했지만

마크롱은 한 번 더 세차게 손을 흔들고서야 뇌주었다. 독단적이고 호 전적인 수컷성과 그것을 참을 수 없어하는 수컷성의 6초간의 대결이었다. …… 지난 5월27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 3천명이 참가하는 초대형 원탁회의가 열렸다. …… 글로벌 시민 감각을 키운 ‘포스트 386’ 후배들, 그리고 좀 다른 감수성과 시각을 가진 여성들을 논의 테이블에 초대한다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고 선언한바, 투명하고 공평한 정치,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을 채워가는 살림의 정치를 보고 싶다. 정치의 기본은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며 정치인의 자리는 지혜와 존경과 명예의 자리이다(조한혜정 2017/06/06).

여성이 주도하는 시민사회와 대비되는 남성 대표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구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별화된 정치 영역의 분리는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소하기보다 심화할 뿐이다. 그리고 남성에 의해 과잉 대표된 대의 정치는 돈과 언론, 네트워크 등의 자본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남성에 의해 독점된 정치 대표성과 재현은 다시 성차를 극대화하고 재생산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성 재현의 실패를 노정한다. 반대로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돈과 시간, 인적 자원에 허덕이며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며, 시민사회를 이끌고 있는 여성 주체들은 운동의 피로(fatigue)와 씨름한다. 그리고 이는 다시 통합적 과정으로서 여성 대표성을 취약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제를리(2016)는 “만약 우리가 더 이상 여성을 공통의 경험과 관심

사를 가진 하나의 일관된 집단으로 말할 수 없었다면, 페미니즘은 누구의 이름으로 싸웠어야 했던 것일까?”라고 질문을 던지며(제를리 2016, 9-10), ‘여성’의 호명은 통합된 주체의 상정으로 해석되기보다는 페미니스트 정치의 의제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Zerilli 2016). 여성의 이름으로 발언하는 것은 페미니즘의 주제로 “여성”을 구성하는 것이라는 그 구성적 특징을 표식하기 위해, “정치의 단정적 순간(the predicative moment of politics)”이라고 명명된다(Zerilli 2005a, 171-172; 제를리 2016, 20에서 재인용). 이외는 다른 방식으로 영은 연속체(seriality)로서 젠더 사유를 제안하며, 동일한 속성을 공유하거나 통합된 여성 주체 대신 사회적 집단으로서 여성 개념을 제시한다(Young 1994).¹³⁾ 또 다른 맥락에서 정인경(2011) 또한 여성을 보편적인 동일성으로 확립해야 할 시도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여성은 인류의 절반이라는 측면에서 단지 사회적 소수가 아니며 사회적 균열에 따라 해체되지 않는 존재론적 기초를 지닌다. 따라서 ‘여성 시민’의 옹호는 이러한 존재론적 기초 위에서 여성 시민의 긍정적 동일성을 확립하려는 시도가 되어야 한다. 요컨대 ‘여성’의 해체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보편적인 동일성으로서 ‘여성’을 가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차의 자연적 현실이 문화 속에서 인식되

13) 영의 페미니스트 정체성 정치와 집단으로서 여성과의 관계 및 정체성 정치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김리나(2017, 221~222)를 참조하라.

고 실천되는 방식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여성성’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정인경 2011, 187).

정인경의 보편적 동일성으로서 ‘여성’의 가공은, 제를리에 의하면 철학적인 토대에 기초한 안정적인 범주라기보다는 ‘정치적 용어’로 이해되어야 한다. “보편성 개념은 특수성들을 법칙 아래 종속시키는 과정으로 이해되기보다는, 공론장에서 정치적 주장하기의 실천으로, 즉, 주관적인 것에 불과한 것을 구성원들에 의해 공적인 것으로 인정 받게 되는 것으로 바꾸어놓는 실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제를리 2016, 20). 버틀러는 전략으로서 ‘여성’ 범주의 창출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전략적인 구성에 그친다 하더라도 실패될 수밖에 없는 기획이며, 이를 통해 생산되는 배타적 결과로서의 ‘여성 주체’에 대한 불완전한 의미화는 그 전략 구성 기반 자체를 불안정화하며 페미니즘 기획 자체에 대한 역습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 대해 그 전략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버틀러, 2008).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차용된 여성이라는 기호는 여성 범주에 의존한 페미니즘 담론의 파생물이며 따라서 공중 납치된 ‘여성’을 단일한 집단으로 차용하는 것에서 발생한 정치적 비용은 이제 페미니즘의 몫이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이 여성 범주의 전적인 포기를 의미하는 것을 아닐 것이다.

버틀러 또한 말하듯 ‘여성’이라는 범주는 “영원한 의미 논쟁이 가능한 장으로 기능”한다(Butler 2006, 113).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성이라는 “범주의 본질적인 불안정성”은 비단 젠더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정치를 지향하는 모든 문화 집단에 해당하는 문제라는 점이다. 정체성 이론은 어떤 [사회문화적] “위상이 확정된(situated) 주체”를 원하지만 그것은 이론적 이상일 뿐이며, “이것과 짝은 소진은 신호일 뿐만 아니라 끝없는 의미화 과정의 신호”이다 (Butler 1999, 182; 서유경 2011, 51에서 재인용). 이에 대해 이진옥(2016)은 보수 여성을 호명함으로써 그 집단을 명백한 차이로서 인정하는 것이고, 보수 여성이 지닌 ‘여성의 이해’는 다른 페미니즘에 대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경합하는 여성의 복수성을 열어 두는 것일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여성 정치가 페미니즘 정치와 대당하는 닫힌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여성의 이해와 페미니스트 가치가 경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동질적인 이해와 동의에 기초한 정치의 추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차이와 다양성이 경합하고 포용하는 정체이자 동시에 공동체의 보편적 이해를 추구하는 정치제도일 때 보편적 범주로서 여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페미니즘 정치는 여성 정치의 필연적인 일부이며, 여성 정치는 페미니즘 정치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3) 젠더 민주주의의 구축과 촛불혁명의 완성

김미덕(2016)은 젠더 정치는 여성을 정치행위자로 등장시키거나 제도적 수준의 정치영역에서 성차에 기반을 두고 여성의 지위와 특성

을 살피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성차 자체에 주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젠더를 사회분석의 범주로서 활용하여 분석하는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젠더정치는 성별 간의 관계, 제도, 사회 구조인 젠더가 어떻게 정치 과정에서 가시적, 비가시적으로 작동하는가를 살피는 것이다(김미덕 2016, 128-129). 페미니스트 정치는 젠더 정치의 관점에서 정치의 역동성을 보다 페미니스트의 이해에 복무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의 대표성이 발생하는 젠더 정치의 역학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기존의 정치 공간의 위계를 그대로 승인하여, 정치권력의 남성 독점이 유지되도록 기여하는 역설을 낳는다. 이 점에서 김은희(2017)의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주의 정치는 공식적 제도적 정치의 차원과 공사의 경계를 허무는 정치와 시민성의 두 차원을 아우르는 실천과 논의를 벌여왔다. 전자의 여성 정치세력화운동이 과도하게 공식적 제도정치에서의 여성대표성 증진을 강조한 한계가 있다면, 후자의 여성주의 정치는 계토회의 우려를 동반한다. 젠더정치는 이 양자의 결합을 통해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의 공간을 확장하는 여성주의 정치를 모색해야 하고, 보편성의 경계를 허물면서 배제되는 이들이 없도록 확장해 가면서 정치공간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조직화해나가야 한다. 새로운 시민적 정치주체와 시민정치운동에 대한 막연한 긍정도 과도한 부정도 미뤄두고 여성주의 정치의 예민한 축수를 세운 채 더디지만 온전한 젠더정치 실천이 모두

에게 던져진 질문이자 과제일 것이다(김은희 2017, 414).

직접 민주주의 및 직접적인 정치 행동을 강조하는 페미니스트 정치가 궁극적으로 대의 민주주의와 여성 대표성, 그리고 여성에게 정치권력을 부여하는 선순환적 연결 고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페미니즘과 여성 정치, 대표성,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와 담론이 보다 심화 발전하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황정미(2017)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직면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젠더를 민주주의의 보편적인 문제로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젠더 없는 민주주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황정미 2017, 46). 천정환(2018)은 ‘1987년형 민주주의’를 끝내고 지상의 과제로서 한국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촛불항쟁과 페미니즘 봉기의 의의를 살려야 하며, 그를 통해 다른 수준의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신기영(2018)은 미투운동을 통해 지금껏 부정되고 고립되었던 여성의 연결된 경험을 연대의 기반이자 정치적 동력으로 삼아, 가부장적 정치권력의 변화로 이어갈 가능성과 당위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황정미(2017)는 페미니스트 정치가 “소수자의 정체성을 정치화하고 주류의 억압을 폭로하는 저항의 기획”으로서 정체성의 정치(황정미 2017, 45)를 넘어 정치적 기획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리스 영의 주장을 빌어 “정의”의 요구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젠더 정의의 요구로 의미

화할 것을 제안한다. 프레이저(2017)는 최근 저서, 『전진하는 페미니즘』에서 정의의 요구에 ‘대표’의 영역을 추가하며, 참여 동수(parity of participation)을 제안한다. “정의는 한 사회를 이루는 모든 (성인)구성원이 서로 대등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회적 장치를 요구”해야 하며, 참여 동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의존과 불평등의 형태와 수준을 제거하는 것과 모든 참여자가 사회적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상호 주체성’의 문화적 가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프레이저 2017, 229). 그녀에 따르면, 정의는 분배-인정-대표의 세 가지 차원을 지니고 있으며, 비록 분배와 인정이 권력관계라는 점에서 이미 정치적이나, 정치적인 것은 “국가가 사법권의 구성과 경합을 구조화하게 하는 의사결정 규칙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분배와 인정에 관한 투쟁이 진행되는 무대를 제공한다(프레이저 2017, 269).

프레이저의 정의 이론은 민주주의 구성의 한 축으로서 젠더를 위상화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데 유용하다. 젠더 민주주의는 편제된 말들로 배치되었을 뿐 놀랍게도 아직 이론화되지 않은 채 남아 있지만,¹⁴⁾ 분배와 인정의 정의를 실현하는 정치적인 장으로서

14) 갤리건(Galligan 2011)은 영국의 서리 대학교에서 열린 “Civic, Political and Cultural Engagement Among Migrants, Minorities and National Populations: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주제의 학술대회의 기조강연자로 나서 “Gender Democracy: the legacy of the 20th Century”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민주주의의 남성적 관행과 원칙들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 성감수성과 젠더 포용적인 관점에서 민주적 행위와 활동, 제도, 과정을 재구성하는 개념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여기서

대표 영역의 동등한 참여 보장은 젠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체가 된다. 그리고 젠더 민주주의는 법적 정치적 범주로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명시하는 개헌안과 여성 대표성 확대를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일차적으로 구축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앞서 서론에서 논의한 것처럼, 촛불혁명이 진정한 혁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다. 정치구조적인 변화 없이 촛불혁명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으며, 젠더 민주주의에 기초하지 않은 혁명의 완수는 있을 수 없다.

5. 나가며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정치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분명한 것은 남성으로 지배된 정치영역의 과도한 남성성의 지배를 통한 정치 영역에서 탈성화(desexing) 전략은 여성이 정치 영역에 진입함으로써 해소하고자 했으나, 정치적 소수자 여성이 오히려 성차를 담지한 자로만 남게 되는 역설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여성과 남성의 공민적·정치적 참가와 참여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독일 녹색당에 소속된 하인리히 뵐 재단은 젠더 민주주의를 독일 사회학자 베드코프스키(Halina Bedkowska)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성주류화를 실행하는 강령이자 원칙으로서 설명한다. <http://www.feminism-boell.org/en>(검색일: 2018년 5월 30일)

는 것이다. 역사학자 한홍구가 기획한 반(反)헌법인명사전에 올라간 405인 중 여성은 단 두 명, 즉 박근혜와 조윤선뿐이라는 사실은 박근혜 이전에는 어떠한 여성도 그러한 권력에 접근할 기회조차도 차단되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럼에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은 정치 변혁의 과제를 ‘여성’이라는 기호에 흡수시켜, ‘여성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라는 명제를 역설적으로 재현하였다. 만약 상징이 임의적(arbitrary)일 수 있다면 우리의 정치 대표자들이 모두 남성이어도 상관없어야 한다. 여성 대표성과 페미니스트 정치의 상관관계는 항상 공통분모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여성 대표성은 대의 민주주의의 치명적 모순과 한계를 집결시키는 양가적이고 모순적 장소이나, 여성 대표성은 페미니스트 정치의 주요한 출발점이자 좌표로서 기능한다. 박근혜가 독점한 여성 대표성은 극단적으로 성별 비대칭적인 민주주의와 대표성 위기의 결과이며, 이 위기의 극복은 여성 정치와 페미니스트 정치의 친밀한 조우를 통한 여성 대표성의 재구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글의 문제의식은 촛불항쟁 그리고 미투운동 이후에도 여전히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이 소수 기득권 남성 카르텔에 의해 독점되어 있다는 일차적인 진단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남성 독점적 지배구조는 젠더를 비롯한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영속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성중립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민주주의 논의에서도 좀처럼 문제되지 않는다.¹⁵⁾ 이 논문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항쟁과 그 이후 대선과 문재인

정부 출범 과정의 젠더 정치의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여, 일차적 권력 관계이자 최종심급으로서 젠더가 급격한 정치 변동 과정에서 여성의 상징적 대표성이 내파되며 여성이 가장 정치적인 장소가 되는 과정을 살폈다. 광장의 여성혐오 정동에 맞선 페미니즘 정치는 여성의 대표성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에 대한 대응이자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점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페미니즘 정치가 지향하는 직접 민주주의, 광장의 정치는 대의 정치의 남성 지배에 대해 도전하기보다 방기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여성 정치와 페미니즘 정치와의 상관 관계를 묻고 분석하면서 ‘정치적인 것’과 여성 대표성 및 여성 범주의 재구성을 제안한다. 여성 정치와 페미니즘 정치 사이의 이중적 긴장은 본질적으로 정치가 남성에게 의해 독점되고 있는 현실과 반대로 여성은 정치의 모든 곳에 있다는 복합적이고 상이한 수준의 ‘정치’ 개념의 역설적 본질에서 기인하며, 여성 정치와 페미니즘 정치 사이의 ‘정치적인 것’의 공유 면적을 넓힘으로써 이 긴장은 정치의 변화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를 위해 보편적 ‘여성’의 정치적 범주화에 기초한 여성 정치는 페미니즘 정치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젠더 불평등의 해소와 다양한 성적 정체성의 인정

15) 일례로 『지금 여기의 페미니즘X민주주의』(정희진 외, 2018)에서 민주주의는 규범적 가치 이상으로 논의되지 않으며, 페미니즘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논하면서도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지속시키는 정치 구조와 남성 편향적인 대표성의 문제는 페미니즘이나 민주주의의 문제로 언급되지 않는다.

을 주장하는 페미니즘 정치의 자장으로서 여성 정치가 기여하기 위해서는 여성 정치의 폭은 기득권 남성 연대의 결속을 해칠 만큼 넓어져야만 가능하다.

페미니스트 정치가 인정, 분배, 대표의 젠더 정의의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서 대표성이 작동하는 방식이 매우 다면적이고 다층적으로 젠더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인지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정치의 성별성이 존재하고, 그 성별성은 다시 보는 이와 말하는 이에 의해 새로운 다층성을 낳는다. 가부장제와 결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부장제를 균열시키고, 젠더 질서를 해체하는 페미니스트 정치가 궁극적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제도 안팎의 개입과 복합적이고 비선형적인 젠더 정치의 과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개입의 과정에 법적 범주로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과 성평등 개헌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젠더 민주주의에 기초한 정치 구조적인 변화 없이 촛불혁명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다~~

참고문헌

강우진. 2017. “87년 체제와 촛불시민혁명: 한국민주주의의 전환.” 『정치비평』.

- 10(1), 47-86.
- 권김현영. 2012. “성적 차이를 대표할 수 있을까?.” 『성의 정치, 성의 권리』. 서울: 자음과모음.
- 권진욱. 2017.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운동: 촛불시민혁명과 한국 민주주의.” 『KDF 리포트』 15. 1-14.
- 김리나. 2017. “메갈리아들의 ‘여성’ 범주 기획과 연대.” 『한국여성학』. 33(3), 109-140.
- 김만권. 2017. “초일상의 정치와 정체의 재구성 - 2016년 촛불은 혁명인가?.” 『시민과세계』. 30. 27~54.
- 김미덕. 2016. 『페미니즘의 검은 오해들』. 서울: 현실문화.
- 김보명. 2018. “혐오의 정동경제학과 페미니스트 저항 - 〈일간 베스트〉, 〈메갈리아〉, 그리고 〈위마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4(1). 1-31.
- 김세은·김수아. 2007. “저널리즘과 여성의 이중 재현: 여성유권자 보도 담론분석.” 『한국언론학보』. 51(2). 226~255.
- 김은실. 2017. “직접 민주주의의 장으로서의 광장과 민주주의 척도로 등장하는 범규범: 정치의 지속을 기대하며.” 『말과활동』. 13. 34~47.
- 김은희. 2017. “그럼에도 페미니스트 정치.” 『그럼에도 페미니즘』. 서울: 은행나무.
- 김지윤. 2013. “여성 유권자와 여성 대통령.” 박찬욱·김지윤·우정엽 엮음. 『한국 유권자의 선택 2: 18대 대선』.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 김형준. 2016. 『정치, 여자가 답이다』. 서울: 여성신문사.
- 김홍미리. 2017. “촛불광장과 적폐의 여성화: 촛불이 만든 것과 만들어가는 것들.” 『시민과세계』. 30. 137-168.
- 나영. 2017. “모순과 혐오를 넘어 페미니즘 정치를 향하여.” 『황해문화』. 겨울호. 98~116.
- 문지영. 2013. “자유민주주의의 ‘여성 차별’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 재고: 탈서구

- 중심주의적 대안을 위한 시론.” 『OUGHTOPIA』. 28(1), 67-107.
- _____. 2012. “한국의 민주주의와 양성평등: 여성정치활동제 문제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6, 149-186.
- 밀레트, 케이트. 1990. 『성의 정치학(上)』. 정의숙, 조정호 역. 서울: 현대사상사.
- 버틀러, 주디스. 2008. 『젠더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조현준 역. 파주: 문학동네.
- 백시내. 2013. “여성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서유경. 2011. “버틀러의 ‘수행성 정치’ 이론의 정치학적 공헌과 한계.” 『대한정치학회보』. 19(2), 31~56.
- 손봉숙·박의경. 2000. 『한국민주주의와 여성정치』. 서울: 풀빛.
- 손호철. 2017. “6월항쟁과 ‘11월촛불혁명’ - 반복과 차이.” 『현대정치연구』. 10(2), 77-97.
- 손희정. 2017. 『페미니즘 리부트: 혐오의 시대를 뚫고 나온 목소리들』. 서울: 나무연필.
- _____. 2015. 『페미니즘 리부트: 한국 영화를 통해 보는 포스트-페미니즘, 그리고 그 이후』. 문화과학 83, 14-47.
- 신기영. 2018. “미투에서 여성정치까지: 사회적 주변자에서 정치적 주체로.” 시민정치포럼(홍익표, 이정미, 진선미 의원 공동대표) 토론회 발표문. 2018년 8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미간행).
- 양정혜. 2002. “대중매체와 여성 정치인의 재현: 시사 월간지와 여성 월간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2), 452~484.
- 에콜스, 엘리스. 2017. 『나쁜여자 전성시대: 급진 페미니즘의 오래된 현재, 1967~1975』. 유강은 역. 서울: 이매진.
- 윤정란. 2010. “4월혁명과 여성들의 참여 양상: 여성신생활운동과 장면정권과의

- 갈등을 중심으로.” 김은하·윤정란·권수현 편. 『혁명과 여성』. 서울: 선인.
- 이종원. 2018. “왜, 어떤 혁명인가?: 혁명으로서 2016-17년 촛불집회에 대한 검토.” 서강대학교 대학원 학술대회. 「동서양정치사상과 한국 현대 정치 담론」. 2018년 11월 8일. 서강대학교(미간행).
- 이지원. 2017. “페미니즘 정치의 장, 페미존(Femi-Zone)을 복기할 때.” 『여/성이론』. 36. 153-168.
- 이진옥. 2018. “개헌의 젠더 트러블: 양성평등이 투쟁의 종착지가 된 성평등 개헌의 역설.” 『문화과학』. 94. 147~175.
- _____. 2017a. “대선과 젠더 정치: 18대 대선과 19대 대선의 불/연속성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7(2). 95~137.
- _____. 2017b. “문재인 정부의 젠더 정치: 탁현민과 여성의 상징적 소멸.” 『여/성이론』. 37. 253~262.
- _____. 2016. “보수 여성 주체에 대한 연구 - 20대 총선 부산여성총연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16(2). 41~92.
- _____. 2012. “박근혜 후보의 여성 대통령론을 통해 본 여성 대표성 문제의 고찰.” 2012년 한국정치학회 동계학술회의 발표문. 2012년 12월 2일. 국립외교원 외보안보연구소(미간행).
- _____. 출간예정. “여성운동과 정당과의 전략적 제휴 가능성의 모색: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복기와 복원.” 『여성과 정치』(가). 경성대학교 출판부.
- 이현재. 2017.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 페미니즘 정치.”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페미광장 1차 토론회. 「페미니즘, 정치의 패러다임을 ‘씩’ 바꾸자」. 2017년 2월 23일. 연세대학교.
- 정인경. 2011. “여성의 ‘해체’와 페미니스트 정치의 가능성.” 『여/성이론』. 25. 169~189.
- 정희진 외. 2018. 『지금 여기의 페미니즘X민주주의』. 파주: 고유서가.

- 제를리, 린다 M. G. 2016. “자유의 정치적 실천으로서 페미니즘.” 조주현 역. 『젠더와 문화』. 9(2). 7~26.
- 조한혜정. 2017/06/06. “수컷들의 정치를 넘어서.” 한겨레.
- _____. 2017/04/11. “대의제에 안녕을 고해야 할 시간.” 한겨레.
- 조현옥. 2005. “한국에서의 여성정치세력화 운동.” 『한국의 여성정치세력화 운동』. 서울: 사회와연대.
- 천정환. 2018. “‘1987년형 민주주의’의 종언과 촛불항쟁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의 문화정치를 중심으로.” 『문화과학』. 94. 22~44.
- 페이트만, 캐롤. 2018. 『여자들의 무질서』. 이평화·이성민 역. 서울: 도서출판 비.
- 프레이저, 낸시. 2017. 『전진하는 페미니즘: 여성주의 상상력, 반란과 반전의 역사』. 임옥희 역. 파주: 돌베개.
- 해니시, 캐롤. 2016[1969].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즘 선언』. 한우리 기획·번역. 서울: 현실문화.
- 허성우. 2013. “경기도 여성정치, 한 걸음 더: 여성 대통령 시대, 여성 정치의 전망.” 「여성대통령시대, 여성정치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발제문. 2013년 7월 19일. 경기도 광주 아이컨벤션홀(미간행).
- 허윤. 2016. “지금 가장 정치적인 것은 여성적인 것이다.” 『말과활』. 11호.
- 황정미. 2017. “젠더 관점에서 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공공 페미니즘과 정체성 정치.” 『경제와사회』. 114. 17~51.
- Celis, Karen. 2008. “Representation,” in Gary Goertz and Amy G. Mazur eds. *Politics, Gender, and Concepts: Theory and Method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elis, Karen, Sarah Childs, Johanna Kantoal, and Mona Lena Krook. 2014. “Constituting Women’s Interests through Representative Claims.”

- Politics and Gender*, 10, 149-174.
- Duerst-Lahti, Georgia. 2008. "Gender Ideology: Masculinism and Feminalism." in Gary Goertz and Amy G. Mazur eds., *Politics, Gender, and Concepts: Theory and Methodology*. Cambridge: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 Eisenstein, Zillah. 2007. *Sexual Decoys: Gender, Race and War in Imperial Democracy*. London: Zed Books.
- Galligan, Yvonne. 2011. *Gender Democracy: the Legacy of the 10th Century*.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Civic, Political and Cultural Engagement Among Migrants, Minorities and National Populations: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Centre for Research on Nationalism, Ethnicity and Multiculturalism(CRONEM), University of Surrey, Guildford, UK, June 29th-30th 2010.
- Heberle, Renee. 2016. "The Personal is Political." in Lisa Disch and Mary Hawkesworth eds. *The Oxford Handbook of Feminist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http://epubs.surrey.ac.uk/2541/1/Galligan1_PIDOP_Barret.pdf(검색일: 2018년 5월 28일).
- Phillips, Anne. 1995. *Politics of Presence*. New York: Clarendon.
- Pitkin, Hanna F. 1967.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Los Angeles: University of Press.
- Saward, Michael. 2010. *The Representative Clai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cott, Joan W. 1999.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 Revised edi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0장. "젠더와 정치에 대한 몇 가지 성찰." 배은경 역. 『여성과사회』. 13호. 2001.

- Skocpol, Theda. 1979.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quires, Judith. 1999. *Gender in Political Theory*. Cambridge: Polity.
- Verge, Tània and Raquel Pasto. 2018. "Women's Political Firsts and Symbolic Representation." *Journal of Women, Politics and Policy*. 39(1). 26-50.
- Young, Iris Marion. 1994. "Gender as Seriality: Thinking about Women as a Social Collective." *Signs*. 19(3). 713-738.
- Zerilli, Linda M. 2016. "Politics." in Lisa Disch and Mary Hawkesworth eds, *The Oxford Handbook of Feminist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Between Women's Politics and Feminist Politics,
Towards gender democracy after Candle light revolution

Lee, Jinock

Korean Women's Political Solidarity, President

This paper begins with the analysis of gender dynamics embedded in the series of political events, from the candle light revolution, the impeachment of the first female president, the presidential election to the the Moon Administration. Whilst the aftershock of the candle light revolution has been maintained by feminist movements, such as Me_Too campaigns, campaigns to legalize abortion and spy-cam protests, the male monopoly in politics with the regeneration of masculinism during and after the revolution has left intact, as demonstrated in the 2018 local election. Given that there is a double tension between women's politics that places an emphasis on women's presence in representative politics and feminist politics that maintains the importance of direct democracy with feminist agenda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politics and feminist politics be articulated through the reconfiguration of the political and women's representation. This is critical to achieve gender democracy, which is centred on the triangle of redistribution- recognition-representation for gender justice. It argues that this transition for gender democracy is to complete the candle light revolution, which can be primarily done through transformation of political systems, that is, reforms of electoral system and constitutional

remaking, ensuring the increase in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 **Keyword:** Candle Light Revolution, Women's Politics, Feminist Politics, Women's Representation, Gender Democracy

투고: 2017/09/30 심사: 2017/10/23 확정: 2017/11/26